

2野 “짜맞추기 셀프수사 진상 은폐 위한 음모”

우상호 “외부에서 진행 의혹”...안철수 “조직적 공작”

진상규명 기구 확대·여론전 등 공세...특검 도입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지난 31일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진상은폐를 위한 거대한 음모이자 짜맞추기 식의 시나리오 수사”라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나아가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검찰을 통해 ‘셀프수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보다는 별도 특별조사 도입을 통해 대통령까지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씨는 즉각 체포돼야 했다. 이 순

간에도 특권 휴가를 누리고 있는 최순실은 악마들과 악의 세력과 입을 맞추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짜맞추기식 시나리오 조차도 외부에서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검찰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기춘-우병우 라인이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시작했다. 석고대죄는 커녕 국민을 향해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당내 진상규명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전국 여론전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자체적인 의혹 조사 등을 통해 특검 도입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의 이석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최순실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삼위일체다. 서로 짜 맞추듯 움직이고 있다”며 “컨트를 타위에 의한 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삼류미술사의 마술을 보는 것처럼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최순실씨를 비롯,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와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역시 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위

원장으로 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천 전 대표는 “민심의 독이 무너졌고 많은 국민이 대통령 하야 요구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수사를 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전격적으로 장외투쟁을 벌이거나, 하야·탄핵 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거리를 두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전국 순회 당원보고 대회를 하기로 했지만, 거리 선전전 등 장외투쟁의 모습은 띠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재 민심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요청 중단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내홍 속으로

비박 “지도부 총 사퇴해야”...친박 “사태 해결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면서 급속히 내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와 일부 중립성향 의원들은 지난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태를 논의한 뒤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으로 짜여진 당 지도부 퇴진을 정면으로 촉구했다.

최 씨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자체했던 당 주도권 투쟁이 본격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현재 당 지도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 주류에서는 거국내각 급회동을 열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태를 논의한 뒤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으로 짜여진 당 지도부 퇴진을 정면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가 결속해도 모자란 판에 비박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는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야3당, 오늘 ‘최순실 정국’ 수습 논의

야 3당은 1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최순실 국정 논란 의혹’ 파문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 10여분 만에 정 원내대표가 퇴장하면서 파행되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야 3당 간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 3당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안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특검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jkpark@

거국내각총리 책임총리보다 막강

거국중립내각, 여야 추천 인사 내각 구성...대통령 2선 후퇴

책임총리, 대통령제 틀 안 권한 강화...이회창·이해찬 역임

거국내각총리-책임총리 차이점

정치권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 수습책의 하나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되면서 그 개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러지는 내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구성된다.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용어로 평가된다.

특히 의원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정치 체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국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2선으로 물러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각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이 모든 권한을 내각에 넘겨주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여야의 합의로 내각 구성이 새로 이뤄진 경우는 있다. 1992년 9월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탈당하며 거국중립내각 수립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현승중 총리 체제가 출범했지만, ‘정권 마무리 내각’이라는 의미가 강했고,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 내각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정치색이 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돼 거국중립내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의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즉, 총리가 헌법에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리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책임총리를 구현한 총리는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에 불과했다. 따라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는 책임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10분만에 끝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거국내각 거부 문제 거론에 대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의 항의를 받은 뒤 국회의장실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與 “靑에 거국내각총리후보, 김종인·손학규·김병준 제안”

김황식·정운찬·진병 등 거론...孫 “與 주도뎀 불참”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면서 총리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여권에서는 총리 후보로 야권 인사임에도 중립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대표는 경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경제관료 출신 전문가인데다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 전 대표는 경기지사와 야당 대표를 지낸 관료 및 경험과 역시 여야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점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박 대통령과 독대에서 “야당이 동의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할 분으로 김종인, 손학규 전 대표를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또 총리 후보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데다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개혁적 색채의 인사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총리가 물망에 오르내린다. 이 외에도

진병 전 경제부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을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작 후보 본인들의 반응은 썰렁한 편이다. 여권에서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는 말을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종인 전 대표는 한 언론에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지금 상황은 사람 좀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 본인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라지, 그렇지 않으면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도 쓸데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알거나 듣는 바 없어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측근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거국내각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교수는 “아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총리 제안은) 공중에 떠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